

## Korean Think Tank Experts Invitation Program 2015 (2015. 4.13~17, JAPAN)

4.13(월) Place: Room "F", 5F, Imperial Hotel, 10:00~11:30

**Mr. JITSU Tetsuya**

(Deputy Chief Editorial Writer, Nikkei Inc.)

*"Japanese Economy"*

□ 전후에서부터 아베노믹스까지 일본경제의 급성장기 성장과정에 대해 소개

- '60~'70년대 고도성장(10%대) 배경에는 교육을 받은 젊은 노동력이 존재(황금의 알)
  - 더불어 낮은 수준의 고정환율(1\$→360¥), 그 당시 신흥국으로는 일본이 유일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는 점, 그리고 성장 위주의 산업재편정책 실시 등도 배경
- '71년 오일쇼크 시 높은 인플레이션(23%)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긴축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으며 '80년대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대미 경상수지가 확대되었고, 통상마찰이 빈번히 발생
  - 자동차 수출자율규제('81), 플라자 합의('85), 보복관세('87), 슈퍼301조 적용('89) 등
- '80년대 말 거품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 및 부동산 관련 세율인상 등 다수의 정책이 짧은 기간 내에 도입됨에 따라 거품이 붕괴되고, '잃어버린 20년'에 진입
  - '거품'의 인식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가능하면 거품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교훈
- 은행의 불량채권에 대한 정리가 지연되었던 것이 잃어버린 20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
  - 경직적 고용관행 및 인구고령화 등
- 아베노믹스의 통화완화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므로,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Q&A>

- Q. '90년대 버블붕괴 이후 불량채권에 대한 정리가 10여 년간 지연되었던 원인이 종종 정치적 리더쉽 부족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례 또는 일화가 있으면 소개 부탁
- A. '92~'93년 은행문제와 관련하여 미야자와 총리 및 공무원들은 공적자금 도입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만 했고 행동은 취하지 않았으며, 자민당을 설득하고자하는 노력이 부족. 이후 주택전문금융기관이 파산하여 공적인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정치가들은 "왜 거기에 세금을 쓰느냐?"며 반대하였고, 관료들도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행동을 취하지 않음. 그 당시 일본사회의 분위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의 낙관론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후 97년 큰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게 됨.

4.13(월)

Place: KKK, Otemachi, 12:45~14:15

**Mr. MIURA Toshiaki**

(Editorial Writer, The Asahi Shimbun)

*"Japanese Politics"*

□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정치의 자리매김과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논의

- '헌법'에 대한 의견 충돌이 지속되고 있어(우파: 헌법 anti, 국기 pro / 좌파: 헌법 pro, 국기 anti) 자민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균열이 있음.
- 자민당은 1955년 이후 38년 동안 단독정권을 지속하고 있어, '55년 체제'가 고도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한편, 그 당시 정치는 파벌정치(중선거구제도에서 파벌간 경쟁, 정치자금과도 관련)라는 특징
- '93년 정치개혁(자민당 패배, 정당보조금법, 소선거구로 변경)으로 중앙집권화가 진행되고 파벌정치는 약화되었으며, 총리교체가 훨씬 덜 빈번해짐.
- '90년대에는 '아픔을 나누는 정치'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셔널리즘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됨.
  - 거의 '대통령제'와 같은 의원내각제, '선거독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 이와 같은 경향은 '민주당' 집권기에서부터 시작됨.
- '모래와 같은 대중'으로 변화(노조·지역·종교 등의 이익단체가 약화됨)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분권화가 강화됨.
- 동일본 대지진과 중국의 부상이 아베총리를 탄생시켰다고 봄.
  - 원자력 발전도 문제를 민주당으로 돌리면서 자민당이 권력을 잡음(한편,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한 점도 있음)
  -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국가주의' 보다는 '포퓰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봄.
- 일본의 우경화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외교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고 생각함.
  - 일반 여론은 여전히 변함이 없음
  - 이웃국가와 화해가 어렵다는 의식이 만연됨.
- 아베가 앞으로 '이데올로기(국가주의)'와 '현실주의'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관건
  -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베는 지지율을 고수하기 위해 포퓰리즘의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를 위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음.
- 미·중 관계와 관련된 조류가 일본의 정치흐름(or 우경화·국가주의 경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 '쇠퇴하는 국가'에서 국가주의가 나타날 것이라 보지는 않으나, 미·중 관계는 중요하다고 봄.

<Q&A>

Q. 아베총리가 구조개혁과 같은 인기가 없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A. 아베는 경제 문제에 큰 관심은 없는 듯함. '노믹스'에도 불구하고 경제식견 없음. 반면, 역사, 교육 등에는 강한 관심을 가짐. 아마도, 경제 문제에 통찰력이 강한 어드바이저가 있는 듯 함. 어찌면, 아베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할지도 모름.

Q. 최근 지지도를 살펴보았을 때, 아베총리가 장기 집권할 것이라 보는지? 그렇다면 언제까지라 예상하는지?

A. 보통 5년 집권하면 장기 집권하였다고 하는데, 아베의 경우 5년 집권의 가능성이 대략 50% 정도 된다고 봄.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에 걸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으로부터 인기도도 높음.

4.13(월)

Place: Tokyo Univ., Hongo, 16:00~17:30

**Mr. FUKUDA Shinichi**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The Univ. of Tokyo)

*"Japanese Politics"*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아베노믹스에 대해 논의

- 금융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제조업)의 대출수요가 감소하자, 은행들이 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였던 것이 버블 형성의 배경
  - 완화적 통화정책도 한 몫을 함.
- 버블 붕괴이후 부실채권정리에 지나치게 긴 시일이 소요된 것이 장기 불화의 원인
  - 부동산가격 상승 및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실채권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만연
- 2000년대에는 부실채권문제 보다는 디플레이션이 저성장의 원인
  - 구조조정과 함께 원가절감(특히 임금상승 억제) 등을 통한 생존전략이 디플레를 야기한 배경
- 아베노믹스는 첫 번째 화살의 경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임.
  - 하지만 실제 효과는 주로 '기대'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실물경제는 아직 판단하기 이름.
  - 소비자심리는 오히려 아베노믹스 이후 악화되고 있음. 아베노믹스 직후 주식 순매수는 주로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일본은행과 신탁(Trust BK)의 순매수가 증가하고 있음.
  - 물가: 소비세 인상으로 2%p 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 2%는 사실 0%대로 볼 수 있음.
  - 생산: 여전히 '08년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시장: 구인배율은 증가했으나, 고용은 주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임금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나 통상 급여의 상승은 최근 정부의 압력에 기인
  - 금융시장: 자금수요는 여전히 저조한 모습
  - 수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고 있음. (에너지 수입증가, 발전수요) 對 중, 對한국 수출도 큰 변화가 없음.
- 제대로 된 성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 재정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사외이사 수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 사회보장제도 개혁, 벤처기업 육성, 법인세 인하, 기술개발(로봇), 여성인력 활용(어린이집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해외인력 유치, 농업개혁(농협개혁), 보건복지업 개선

**4.14(화)**

Place: "Kaede", 4F, Imperial Hotel, 08:00~09:30

**Mr. HAKU Shinkun**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Democratic Party of Japan)

-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일본의 시민감각(서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한·일 차이를 중심으로 기사를 냈으며, 한국 신문의 사설을 제대로 번역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당시 느꼈던 한일 간 가장 큰 문제는 "one phrase politics"
  - 월드컵(2002)이 일본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운 계기가 됨.
    - 본인도 매스컴에 노출되면서 얼굴이 알려짐, 한국은 "화를 내는 나라"에서 "보통사람의 나라"라는 인식으로 바뀜.
  - 국회의원으로서의 시민에 대한 감각은 한·일이 유사하지만, 역사문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감정적 대응 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우선시될 필요
    - 한·일 역사적 사실을 역사가들이 함께 "먼저" 밝히고 의견일치를 보는 게 먼저 아닌가?

**<Q&A>**

- Q. 제일교포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는 점, 연금가입이 가능해졌다는 점 등이 놀라운데 어떻게 협의를 이루었는지 궁금함.
- A. UN 권리조약 등을 수용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이민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4.14(화)

Place: Room "F", 5F, Imperial Hotel, 10:00~11:30

**Mr. HOSHIRO Hiroyuki**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Social Science, The Univ. of Tokyo)

*"Japanese Diplomacy"*

□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함.

- (2000년 이전) 미국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본 대외정책의 주요 흐름이었음.
  - 자율수출규제(1989), 자위대파병(1992), ODA를 통한 북한지원(1994) 등
  - 한편, 일반 국회의원은 외교에 관심이 적었음.
    - \* Zoku Giin: special interests on specific industry, but No Foreign Zoku Giin.
    - \* 요시다 원칙: 국방비(GDP대비)를 일정수준(1%)이 넘지 않도록 엄격히 지킨다는 약속
- (2000년 이후) 외교정책의 무게추가 외교부에서 총리에게로 이동하고, 자국 내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세력이 약화되면서 좀 더 주도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려는 경향이 강화
  - 헌법 9조에 제약적 조항을 추가하면서, 자위대(국제분쟁 해소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를 구성할 기반을 가짐.
  - '집단적 자위권'은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으나, 아베정권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인정여부가 논란을 야기
    - \* 헌법 개정이 매우 어려울 것(국회 2/3, 국민투표 1/2)으로 예상되고 있어, 헌법 해석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Q&A>

- Q. 일본 헌법을 집단적 자위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미·중 관계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교정책을 평가한다면? 개인적인 평가도 좋음.
- A.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강한 주장이라는 판단이 중론. 하지만, 아베 정권에서는 몇몇 정치학자를 불러서 회의를 한 후 집단적 자위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움.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권리가 모든 나라가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판단은 시기상조라 생각. 정식으로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 한편, 집단적 자위권 주장에 미·중 관계는 배경이 아닌 듯 함. 국제적으로,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의 테러리즘 및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함.

#### 4.14(화)

Place: KKK, Otemachi, 13:30~15:00

**Mr. IZAWA Yasuki**

(Professor, Faculty of Sociology, Tokyo Univ.)

*"Korean in Japan"*

#### □ 재일교포의 현황에 대해 논의

- 자이니치 한인(재일교포)은 1930년대 이주한 사람(70%)과 1980년대 이주(30%)한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 '14년 기준 일본내 외국인 거주자(207만) 중 51만 여명이 한국인으로 중국인(65만) 다음으로 많음.
  - 자이니치 한인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고령층의 사망, 국적이전, 자녀의 일본국적 취득 등)
    - \* 당시 재일교포의 국적을 일본으로 전환하는 심사가 있었는데, 이 때 자국 성향을 보이면 '마이너스'로 평가(집안에 본인과 가족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 평가)
- 자이니치 한인은 민족적 소수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거리감은 여전히 좁혀지지 못함.
- 자이니치 한인의 정체성은 "Marginal Man" (경계에 있는 사람, 주변인) 이라고 볼 수 있음.
  - '80년대에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한국 유학을 갔지만, 군사정권에 의해 '반쪽짜리', '빨갱이' 취급을 받아 다시 돌아온 경우가 많음.
  - ※ 하지만 '객관적 시각에 대한 열망'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음.
  - ※ 자이니치 한인들의 정체성이 아직도 주변인에 머물고 있는 데에 대한 설명으로, 이들은 미래 자신의 모습,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족에게서 얻으며, 그들의 삶이 좌절되었다는 점을 관찰하면서 기대를 갖지 않고 '낙차'(기대와 현실 간)를 줄이기 위해 결국 '포기'하여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다는 이론을 제시

#### <Q&A>

Q. 자이니치 코리안, 주로 어떤 직종에 일하고 있는가? 한-일 관계 · 협력 관련된 일?

A. 1980년대 이후 이주한 New comer는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한편, 그 이전의 한인들의 경우 국적으로 인한 차별이 감소(국적 취득, 부모들도 자식결혼 · 취직 이전에 국적 취득)하면서 취직도 나름 잘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차별적 경향이 존재. 한편, 상대적으로 일찍 국적조항을 폐지했던 의사 · 변호사 · 연구자 등 직종에서 한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음. 선망을 받는 직업임.

#### 4.14(화)

Place: MOF, Kasumigaseki, 16:00~17:30

**Mr. NAKAYAMA Mitsuteru**

(Director for Fiscal Affairs, Budget Ministry of Finance)

*"Japanese Fiscal Policies"*

#### □ 일본의 재정정책에 대해 논의

- 세출에서는 이자비용이 총지출의 10%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수에서는 소비세가 17.1조엔(17.8%)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90년대 초 이후 세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감세, 디플레 진행, 잠재성장률 하락(생산가능 인구) 등이 배경, '09년부터는 증가추세로 바뀜.
- 재정악화의 원인은 사회보장예산의 증가('90년 11.6조엔 → '15년 31.5조엔, 1년에 1조엔!)
  - 일본은 사회보장 관련 低부담 高수혜 국가에 해당됨.
  - 1차 베이비부머가 75세(2025년)에 도달하게 되면 의료비 국가보조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재정 위험
    - ⇒ '90년대 이전에 의료보험시스템을 확충하였으나, 국민의 부담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었던 것이 재정악화의 원인
- 일본의 재정건전화는 primary balance (deficit)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재정수지는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거의달성), 향후 5년 계획은 모색 중임.
- 한·일간 주요 차이는 경제규모, 통화국제화 정도라고 보며, 여기에는 각국에 장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존재
  - 한국처럼 외환문제가 발생했다면, 재정건전화 노력을 미리 시작했을 것.
-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감소로 향후 일본의 재정은 해외부문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 전망

#### <Q&A>

Q. 국채관리에 있어 유동성 문제는 없는지?

A. 아베노믹스는 현재 일본경제에 있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 한편, 금리인상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유동성 문제는 없음. 다만, 중앙은행 본원통화를 통해 재정을 조달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면, 엔화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양적완화 시 재정 중앙은행의 목표를 인플레이션 2%도달로 설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중앙은행이 국채를 계속 매입한다면 재정조달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

4.15(수)

Place: "Kaede", 4F, Imperial Hotel, 08:00~09:30

**Mr. NUKAGA Fukushim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iberal Democratic Party)

자민당 거물, 한일관계 중요 역할, 30년 의원, 한일의원연맹 일본 회장

□ 그간의 한일 관계에 대해 경험한 바를 공유하고자 함.

- 한일 관계에서 경제협력은 활발하지만 정치부문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
  -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감정적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총리친서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으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음. (아직까지 양국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하였음)
- 위안부문제에 대해 아베총리도 '고노 담화'를 인정하고 일본의 과오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고, 정상간 이 문제에 대해 방향을 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실무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음.
  - ※ 미야자와 총리(김영삼): 고노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총리가 사죄를 하고, 일본정부가 의료지원의 형태로 1인당 수백만 엔의 보상금을 주는 등 위안부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매듭 짓자" 합의)
  - ※ 오부치 총리(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국회에서 연설("일본의 침략은 심각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일", 하지만 전후 "일본의 발전과 아시아 국가에 대한 기여는 높게 평가해야 할 일") 하였으며 오부치 총리가 사죄의 표현을 함.
    - \* 산케이신문 카토지국장 출국정지문제 → 최근 해결
- 한일수교50주년(6월21일) 이전에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이슈
  -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도 한일관계의 개선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출범(헌재, 위안부 관련 판결, 노도총리, 위안부문제 관련 재안건) 이후 관계가 악화되었고 다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산케이 지국장 출국정지 문제해결에도 여러 물밑 작업이 필요 하였듯이 '솔직하고 다각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한국정치가 더 '포퓰리즘'에 노출되어 있는 인상이 있으며, 리더들이 올바른 의견을 제시해 줄 필요
  - 정치인(리더)은 10~20년 앞을 바라보고 행동할 필요

#### 4.16(목)

Place: Room "F", 5F, Imperial Hotel, 10:00~11:30

**Mr. YUHARA Tetsuo**

(Research Director, The Canon Institute of Global Studies)

*"Japanese Energy Policy"*

□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향후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화석에너지 고갈로 원자력 이용은 필수

-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하나, 충분하지 않으며 2100년경 1/3 정도는 핵에너지에 의존해야 할 것.

\* 국민의 50% 정도는 원자력 반대, 하지만 국가로서는 진행해야할 문제

\* 하토야마 수상은 원자력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한 바 있으나, 현재는 21~22% 정도

- 현재 일본은 동 일본 대지진이후 주로 LNG (43.2% ← 29.3%)에 의존하고 있음.

\* 원전반대 이유: ① 수소폭발 가능성 ② 폐기물 문제

\* 폐전국은 원전개발 자체가 불가: 기술을 순전히 받아 들여야 함.

\* 원자력, 경수로, 해저 →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 어류가 보여 좋은 부문

◦ 지구온난화 문제를 감안하여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세워 나갈 필요

- 중국·인도·아세안 지역에서 '석탄 사용'을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

- 국가 간 기술차이, 설비차이를 감안하면 한계 CO2 감소비용의 국가 간 차이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함.

**4.16(목)** Place: Ajinomoto, 13:30~15:00  
**M/S TAKAHASHI Kenzaburo**  
 (GM, Corp. Comm. Dept., and KANEKO Keiji, Group MGR,  
 Overseas Food & Seasoning Ajinomoto Co.)  
***"Ajinomoto's Global Strategy"***

□ 아지노모토의 해외 식품사업(3개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 한국에 '03년에 진출
  - 인구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진출
  - ※ 1908년 이케다 박사가 최초로 MSG 첨가 조미료를 개발하였으며, 우리나라 말로는 미원(일본어로는 우마미)의 시초가 됨.
- 주로 라면, 조미료, 음료 등의 상품을 제조
- 최근 엔화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자리수대로 성장함.
- 향후 3년을 '가속성장기'로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일부 저 개발 국가에서는 아지노모토 조미료가 '화폐'로써 사용되기도 함. (파프아뉴기니 등)
  - M&A를 통한 현지 진출에도 적극적임: 터키 No.1 식초회사 인수 ⇒ 현지 유통능력 흡수

**<Q&A>**

Q. 엔저를 감안하면 해외부문 매출액 성장은 어떤지?

A. 현지 통화 기준으로 매출액 증가율은 10%대를 기록하는 등 아지노모토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엔화 기준으로는 20%대 성장을 기록하여 엔저도 엔화기준 매출액 증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당 회사의 구조개혁 노력(현지화 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4.16(목)

Place: KKK, Otemachi, 16:00~17:30

**Mr. KOJIMA Katsuhisa**

(Sn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Japanese Society"*

□ 일본의 인구구조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현재까지는 고령화·저출산에도 일본 인구는 증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고령자(65~75세)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많아질 것.
  - 사망률이 합계출산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앞으로는 연간 20만(작은 도시 1개 규모)명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
  -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도 많아지는 추세이며, 지역별로는 도쿄 등 도시지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 2100여년 일본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5천만) 수준으로 감소
    - \* 2010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30%가 비정규직, '90년대 후반부터 임금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률은 4%대를 기록
  - 시장소득의 경우 불평등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빈곤율은 16%를 기록하였고, 특히 노인 및 한 부모 가정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사회보장제도로는 건강·연금보험이 있으며 요양보험, 고용보험, 저소득 생활보호 등이 있음.
  - 이중 70% 정도가 고령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Q&A>

- Q. 2005년경부터 합계출산율이 완만하기는 하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 보임.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였는지?
- A. 출산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가 많아진 것이 최근 합계출산율 증가의 배경이라 생각하고 있음. 하지만, 고령에서부터 출산을 시도하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4.17(금)

Place: JRI, Akasaka, 10:00~11:30

**Mr. TANAKA Hitoshi**

(Chairman, Institute for Int'l Studies,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td.)

***"Korea-Japan Relationship"***

□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고자 함.

- 일본에게 있어 한국은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나라
  - 이념을 같이하는 등 공통점이 많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
- 국민 대부분도 "한일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 \* '88올림픽 때부터 교류가 확대되었고, '02년 월드컵 때에는 김포·하네다 셔틀항공도 신설된 바 있음.
- 역사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한일 관계는 장기비전을 가지고 계속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 역사교과서, 위안부, 아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문제 등이 주요 원인
  - \* 누가 총리와 대통령이 되던지 비전을 계속 가지고 협력을 추구해야 함.
-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중요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이며, 양국의 국민감정도 악화되고 있어 우려가 됨.
  - 한국은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 바 있으며,
  - 일본 국민들도 '한국과 엮이지 말자'라는 의견도 존재
-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 지금 북한의 의사결정구조가 '충동적'으로 변모하였다고 느끼며, 현재 북한은 아주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
- 한국의 통일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 한국의 흡수 통일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 정부와 지식인들이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

<Q&A>

Q. 한일 정상회담이 아직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성사된다면 가장 중요한 안건은?

A.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안부문제가 아닐까 생각함. '93년에 고도담화 등에서 일본으로써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되었다 생각(한일 기본조약협정 등). 한국정부도 보상금을 내야할 책임이 있으나, '한국 정부는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한국 현재의 판결이 있었음. 이와 같은 상황을 일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됨. 일본은 '성의껏 노력' 해 옴. 일본의 '직접 보상' 등은 합의할 수 없는 부분.

4.17(금)

Symposium Panel Discussion, 14:00~17:00

Mr. TAKAYASU Yuichi (Moderator)

*"Korea, its Economy, Industries and Corporations in Global Economy"*

□ 한국경제는 일본을 쫓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어 본인은 아래와 같이 답함.

◦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이 1%대에 머물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부채문제도 많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업부문은 건전한 것 아닌지? 오히려 한국 기업부문과 관련해서는 재벌문제가 가장 큰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정책이 금융지원에 집중되었던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른 바 좀비기업이 양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음. 금융권에서 집계하고 있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 한편,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저생산성 및 좀비기업 문제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나, 경제 전체적인 이익의 배분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로 내려와 있지만, 유가의 영향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2%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지?

- 근원물가가 2%대 상승하고 있는 데에는 올해 초 담뱃값 인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제외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1%대에 머물러 있음. 수요부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를 장기간 하회하고 있으며, 물가연동채권을 통해 살펴본 기대인플레이션은 0%로 내려와 있다는 점 등은 여전히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